



민주 시·도당 신년 5·18묘지 참배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 합동참배식에서 김동철 시장위원장과 주승용 도당위원장이 대표 분향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단체장,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6·2 지방선거 주요일정											
2월 2일	2월 19일	3월 4일	3월 4~6월 2일	3월 21일	5월 14~18일	5월 18~19일	5월 26일	5월 27~28일	5월 27~6월 2일	6월 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전 12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의원, 구의원,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 전 90일부터 개시일 90일부터)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적 종료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 전 60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확정	부재자 투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오전6시~오후6시)	

복잡한 투표...여덟번 찍는다

교육감·교육의원 추가...사상 최대 '1인 8표' 광주·전남 428명 선출...내달 예비후보 등록

6월2일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사상 최대인 '1인 8표제'로 실시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2장이 더 늘어나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는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주요 선거일정은 2월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2월19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자치구 기초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3월21일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18~19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5월27~28일 부재자 투표가 이뤄지며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명당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투표가 복잡하고 어려워 노인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규모 사표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광주시장, 전남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군수), 광역의원(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정당), 기초의원(구의원, 시·군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정당) 등 기존 '1인 6표제'에 교육감(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과 교육의원(광주시교육의원, 전남도교육의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101명(광주시장 1명, 구청장 5명, 시의원 19명, 시

의원 비례 3명, 구의원 59명, 구의원 비례 9명, 시교육감 1명, 시교육의원 4명), 전남지역 327명(전남지사 1명, 시장·군수 22명, 도의원 50명, 도의원 비례 5명, 시·군의원 211명, 시·군의원 비례 32명, 도교육감 1명, 도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28명을 선출하게 된다.

경쟁률이 4대1로 가정한다면 입지자들은 1천712명이 경쟁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32명 중에 8명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벽보다 한 곳에 32장이 나뉠게 된다.

실제로 광주시장 입지자만도 10여 명이 넘는다. 27개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입지자는 무려 180명이 훌쩍 넘는다. 후보들이 넘쳐나 누가 누구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정해진 기호를 부여받지만,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 기호와 상관없이 후보 기호가 정해진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지 쏠림현상이 거센 광주·전남의 경우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문지마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비례대표 투표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뉘며 정당 투표도 두 번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유지되면서 한 선거구에 많게는 10여명이 넘는 후보의 출마가 예상되고 기호부여 방식도 여전히 복잡하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추가되면서 투표절차가 복잡해 유권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모의투표 실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경선 어떻게?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회동 지방선거 공천 방식 논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등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올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3일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일 오후 라마다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경선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경선 방식 결정은 광주시당에 있는 만큼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선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공천 방식을 결정, 이를 중앙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운영위원으로 강운태 의원을 선임하고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상무위원의 추가 배정 등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인사를 1명씩 추천하고 광주시당에서 3명을 추천, 총 12명의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김동철 시장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시민 여론 반영 등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보다는 상호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 결정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기득권을 버리고 보다 훌륭한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선 방식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 큰 대한민국 만들자” 李대통령 오늘 신년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집권 3년차를 맞는 새해의 국정운영 기초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위기 극복을 이뤄낸 국민적 저력을 토대로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3일 "이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서 '국가' 개념을 특히 강조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격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더 큰 대한민국'을 새해 비전으로 내놓은 것은 2010년의 역사적 의미를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

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각각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인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올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과 국가브랜드를 한단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민적 협조를 거듭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6월 지방선거 꼭 승리하자” 여야 신년인사회

2010년 새해를 맞은 여야는 각각 지난 1일 신년인사회와 단배식을 열고 2012년 대선의 교두보인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 6·25 전쟁 60년이 되는 해이며, 11월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한다"며 "방곡의 설움, 전쟁의 참혹함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60년, 4·19 혁명 50년, 6·15 남북공동선언 1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라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진행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2년간의 갖은 실정을 과감하게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류근찬 원내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배식을 갖고 세종시 원안 사수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전국정당화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 친박연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각각 당사에서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배식을 열어 지방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